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 제기… “신뢰기반 금융 인프라 혁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임박

민관, 디지털자산 활용 논의 활발
전문가들 해외 의존도 축소 목소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작해야”

“일반 가맹점들은 원화로 자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현금자산이 가상자산(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길목에서 전자약정체결 기능 고도화(AM L·KYC), 게이트키퍼 규제만 강화하면 중앙은행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시장통합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



(왼쪽부터)김계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호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등이 토론회하고 있다. /나누리 기자

론 네트워크 자체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기능을 내재화하는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금융당국은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도산 절연)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설계 중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암호화폐 및 스테이

블코인 시장은 아직 규제·감독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담보자산이 부실해지거나 발행기관이 문제가 생겨도 예금보험 같은 전통적 금융안정망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약정 체결 관문을 강화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고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유도하고 해외 스테이블 코인의

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지니어스 법안이 마련돼 해외 스테이블 코인에 의존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며 “시장 질서 유지와 투자자보호는 발행인 인가 제도 및 인가 요건을 강화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대상은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곳으로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진입할 수 있고, 일정한 개무건전성 등을 충족한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 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신기술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이 낮은 규제 때문에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장소 규모의 제한을 두고 규제를 적

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 출시하고 시험 검증하는 것이다.

임 교수는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의 감독권한 아래 은행과 핀테크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일본도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발행 유통에 대한 엄격한 분리는 분산원장 기술의 경우 스마트계약이 진행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토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는 자생적으로 모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스템 리스크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전기차, 중저가 중심 질서 재편… 캐즘 통과 국면 들어서

성능·충전 등 불확실성 감소 추세
혁신상품 단계 넘어 대중시장 진입

전기차 시장이 다시 분기점에 서고 있다. 글로벌 수요 증가, 보조금 상승 등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며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있다. 최근 산업계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전기차는 ‘혁신 상품’의 단계를 넘어 ‘대중 시장’으로 진입하는 캐즘 통과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먼저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과 메르세데스-벤츠의 협력 확대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8년부터 2035년까지 벤츠 북미·유럽 생산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약 14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150GWh 장기계약까지 포함하면 20조 원이 넘는 파트너십이다.

이는 벤츠가 프리미엄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볼륨 모델 확대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로 방향을 바꿨음을 보여준다. LG



엘티셀즈 오하이오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LG에너지솔루션

엔솔이 NCMA·LFP 등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한 점도 글로벌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 중심’ 전략과 맞닿아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변화 역시 명확하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EV5·EV4 등 합리적 가격대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지배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 ▲2030년 친환경차 563만3000대 판매 ▲2030년 하이브리드 모델 28종 확대 ▲2027년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출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도입 ▲아이오

닉3등 현지 전략형 전기차 출시 지속 등을 추진한다.

수입차 시장의 흐름도 대중화 전환을 뒷받침한다. 테슬라는 모델 3·Y 가격을 최대 700만 원 인하하며 점유율을 회복했고, BMW·아우디도 중간 가격대 전기차 확대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ID.4를 앞세워 국내 시장 재진입을 준비 중이다. 이는 전기차 시장이 프리미엄 이미지에 비해 가격·실사용 가치 중심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환경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고가 차량 지원을 축소

하고 중저가 차량 중심으로 기준을 재편하면서 시장의 실수요 기반 확대를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반기 중 이미 보조금이 소진될 정도로 실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내년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100만원 추가 지급하면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사실상 인상되는 셈이다.

실제 유럽에서는 캐즘이 종료되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전기차 판매량(유럽연합·유럽자유무역연합·영국 합산)은 202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2% 성장했다. 현재 판매량이 유지되면 연간 최대 판매량 경신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 시장이 캐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다”며 “우수한 효율성과 충전 부담 해소라는 장점을 갖춘 만큼 소비자들의 호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후폭풍… 독과점 등 규제 리스크 급부상

‘규제당국 심사·할리우드 반발’ 압초

세계 최대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가 100년 역사의 할리우드 명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는 ‘세기의 딜’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삼페인을 터뜨리기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규제 개입 시사와 할리우드 영화계의 거센 반발이라는 거대 압초를 만났다.

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는 5일(현지시간)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 및 스트리밍 서비스(HBO·HBO 맥스) 부문을 분할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는 약 720억 달러(약 106조 원)에서 최대 830억 달러(약 12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관련 업계는 이번 인수를 미디어 산업의 권력 축이 전통적인 스튜디오에서 테크 기반의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합병이 완료될 경우, 양사의 미국 내 유료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은 약 30%에 달해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승인이라는 최종 관문은 그 어느 때보다 좁아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넷플릭스는 이미 너무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이 결정에 관여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할리우드 내부의 반발 기류도 심상치 않다. 영화인들과 노조는 이번 합병이 ‘영화 생태계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미국 작가조합(WGA)과 감독조합(DGA) 등 주요 노조 또한 성명을 내고 인수 차단을 촉구했다. 거대 바이어(넷플릭스-워너)의 탄생은 콘텐츠 구매처 감소로 이어져 제작 물량 축소, 임금 삭감, 대규모 구조조정을 야기할 것이라는 논리다.

넷플릭스 측은 “창작 인력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미 2022년 이후 스트리밍 거품 붕괴와 파업 여파로 일감이 줄어든 할리우드의 공포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서현 기자 seoh@

KDI ‘12월 경제동향’ “韓, 소비중심 경기 개선”

국내 경제가 소비 중심의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다만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도 통상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는 점은 경기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11월 전망에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어 이달에 ‘완만한 경기 개선세 유지’라는 문구를 썼다. 경기 진단이 ‘둔화→완화→개선’으로 점차 상향되는 모습이다.

이 보고서는 “소비는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도 지속되며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또 “소비와 밀접한 부분의 고용도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건설업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의 교역이 다소 위축됐다고도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다만 이는 추석 명절 이동으로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2일 줄어든 것에 따른 영향으로, 9~10월 2개월간의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1.6%의 완만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화폐 할인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갔다.

10월 소매판매액은 낮은 추석의 영향으로 상승폭(2.2%→0.3%)이 축소됐으나, 9~10월 평균으로는 1.3%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1.9%), 예술·스포츠·여가(9.4%) 등의 생산도 계절조정 전월대비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